

# 민선 8기 광주·전남 국비 확보 사활

### 기재부 이달까지 3차 심의 마무리 정권바뀌고 기재위 소속의원 없고 '긴축재정' 기조에 상향 역대 최악

민선 8기 광주·전남의 내년 첫 살림을 책임질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민의힘이 들어선 새 정부를 맞아 지역 현안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상당수 누락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국비 예산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획재정부 소속 의원이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국비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마저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해 보다 전국 17개 시도 간 국비 확보전도 치열해 지는 모양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5일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계획사업과 의무적 지출 위주로 1차 심의를 마친데 이어 같은 달 2차 심의를 열고 1차 심의 보류사업과 지자체 신규·주요 계속 사업 심의

를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이달말까지 2차 심의 보류사업과 미결·쟁점사업, 소액사업 등을 중심으로 최종 3차 심의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내년도 국비예산 일정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의 국비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상대 제2차관과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을 면담한데 이어 예산실 주요 부서들을 찾아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6월 지역 국회의원과 의회 산장책임자 회의를 시작으로 7월 8일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7월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7월 18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과 관련한 초기 사업비(국비 30억원)를 비롯한 상생형지역발전사업(GGM) 근로자의 공동복지 지원을 위해 주거비 및 교육 지원비(국비 22억 5000만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기반구축비(국비 105억원 증액)을 비롯한 '제3순환 고속도로망 개설'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비(국비 50억

원)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문화전당 교류관광특화공간 조성, 자동차 종합 테마파크 조성, 미래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기업 역량 강화, 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미래 자동차 R&D 특화 교육센터 지원, 미래 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사업 등 주요 미래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도 기재부 출신인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중심으로도 내년도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8082억) 조성 등 신규 사업 70여개를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남도는 박 부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관련 정책 실무부서 등이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부서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박 부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관련 정책 실무부서 등이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부서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각각 3조2155억원, 8조 391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시·도 관계자는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그 어느해 보다 국비확보를 위한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민선 8기 핵심 사업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농기계 면세유 상승분 10월까지 추가 지원

### 지원단가 1 l 당 269원으로 상향

전남도가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단가를 늘려 오는 10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면세유 가격이 60% 이상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되는 상관이 없다. 사용량이 많은 농업용 경우 가격은 올해 1월 1 l 당 가격이 961원이었으나 최근 1500원대를 넘

어섰다.

전남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유가 상승분의 50%인 1 l 당 183원씩을 정액 지원,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에 도움을 줬다. 이번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선 1 l 당 269원을 보조한다. 지원단가를 1 l 당 183원에서 상향한 이유는 당초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 이후에도 면세유 가격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사업 대상은 기존과 같이 전남에 거주하면서 면세유유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다. 전남도는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면세유(휘발유·경유) 6400만 l 에 한해 1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현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3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이후에도 유류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추가 지원을 하게 됐다"며 "가뭄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농업인 16만명에게 면세유 구입비 99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태풍 이후 폭염 피해예방 총력

### 취약 계층 홍보·예방활동 강화 농수축산분야도 적극 대응

전남도가 제5호 태풍 '송다', 제6호 태풍 '트라세'가 소멸하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지역은 지난 6월 19일 첫 폭염특보가 발표된 이후 지난 2일까지 누적 폭염일수 33일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폭염일수 26일보다 7일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온열질환자 74명, 151개 축산농가 돼지, 닭, 오리 총 2만4684마리 폐사, 농작물 시들음·고사 471

ha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2개 시·군과 함께 각종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와 예찰·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폭염대책 중 어려운 계층 안부전화와 문자발송, 마을가두방송의 횡수 및 빈도를 늘리기로 했다. 시·군 도로살수차 운영도 활동반경을 넓히고,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횡단보도 인근 그늘막 등 피해예방에 중요한 폭염 저감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특히 폭염대책 개선을 위해 무더위 쉼터 활성화,

야간·주말 연장 운영하는 쉼터 냉방비 추가 지원, 어르신 대상 선크림 보급 등 보완 사항을 즉시 조치키로 했다.

또 올해 폭염대책에 반영된 기존 '폭염대비 양산대여소' 서비스를 운수업체와 협업체 '이동하는 양산대여 버스'로 발전시키고, 2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드론활용 광범위 예찰활동'이 타 시·군에 확산하도록 인력, 예산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입추가 다가오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보건복지, 농축산식품, 수산 등 관련 실국과 폭염이 끝날 때까지 총력을 다해 예방과 피해복구에 힘쓰겠다"며 "도민들도 온열질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말고 특보가 발표된 날 야외에서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방의 일 지자체 스스로 결정 정책 집행 행정시스템 갖춰야



지난 6월에 열린 대구시 제6기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워크숍.

/대구시 제공

###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 <1> 프롤로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지역 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 독립성, 어떤 사업을 선택해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자주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면서 "지방 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지방시대' 모토는 재차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교통 접근 권한을 공정하게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을 시·도지사 앞에서 강조했다.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자치분권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 로드맵을 수립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지방분권과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자치분권 2.0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이다.

이처럼 자치분권 업무는 31년 전부터 대통령

소속 위원회 뒤편이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자치분권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1년간 대통령들이 직접 행거는 자치분권에 대해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두용 대구광역시 분권선도팀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 급증할 때 감염병 전담국 하나 만들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자치분권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이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지자체의 국 신설은 정부 부처 승인 사항이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장은 급한데 행정에 묶여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한 셈이다. 정 팀장은 자치분권, 즉 지방의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정치권에서 모두 공감하는 가치이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역을 방문하면 영문서처럼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 자치분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치분권 방향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동취재를 통해 진단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국내는 지난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분권에 앞장 서고 있는 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메가시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찾았다.

또 해외 취재를 통해서도 '가난하지만 매력적인 도시'(독일 베를린), '부유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스위스 베른),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프랑스 리옹)라는 주제로 해답을 찾아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위르벤'을 방문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들어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